

이슈브리프 863호
(2026. 7.13)

[K-Diplomacy 탐색 시리즈 2] 실용외교와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한 글로벌 책임강국 외교

제863호

최용환 yonghwan@inss.re.kr



국문초록

현재의 세계정세 변화는 미국 중심 패권질서의 부식, 서구 주도 국제질서의 쇠퇴, AI발전에 따른 인간과 기계의 경계 붕괴 등 다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각 층위의 변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며, 그 결과는 패권 공위(空位)의 혼란과 이익 기반의 각자도생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정세 하에서 한국이 스스로의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선택지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구조적 이익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관계적·거래적 이익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이 견비되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동맹 재정의와 부담 분담 요구, 한미 간 연루·방기 딜레마를 고려할 때, 한국은 자강에 기초한 동맹전략과 핵심 이익에 대한 주권적 선택권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긴요하다. 첨단 제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적자원, 매력 있는 문화, 그리고 회복력이 증명된 민주주의 제도 등 한국이 가진 자산을 활용한다면, 거래적 동맹의 시대에 한국의 이익 관철을 위한 동맹관리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식민 경험을 가진 선진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힘에 기반한 다극화의 한 축이 아니라, 동의와 협력에 기반한 규칙 기반 다자주의 질서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중견국 연대, 국제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적극적·능동적 외교를 통해 국제규범의 수용자에서 규범 주도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한국의 지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글로벌 책임강국, 전략적 자율성, 포용적 균형전략, 자강에 기초한 동맹전략, 실용외교

이익과 거래의 시대, 야만의 국제정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면 언제나 세계사적 격동과 위기의 국제 질서가 언급되어왔다. 그만큼 한반도는 지정학적 충격에 언제나 민감했던 지역이지만, 최근의 세계정세 변화는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우선,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불리던 기존 질서가 난폭하게 해체되고 있다. 일방적 관세부과와 무역보복조치가 난무하고,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이 형해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가 안보의 논리로 작동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요동치는 정세를 대표하는 갈등의 축은 미중 전략경쟁이다. 최근에는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간 전술적 데탕트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미중 갈등의 구조적 측면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간 경쟁의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G2시대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G0시대로 규정하기도 한다. 전자가 3위와 월등한 국력 격차를 보이고 있는 두 초강대국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후자는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시대가 끝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패권국가가 등장하지 않은 현실에 주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의 공통점은 2차대전 이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패권국으로 부상하였던 미국 중심 질서가 부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은 2025년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 더 이상 세계의 공공재를 제공하던 거인(Atlas)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달리 대할 것을 공언하였다. 기존 패권국이 약화되었으나 이를 대신한 새로운 패권국이 보이지 않는 패권 공위(空位)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중심 대외정책에 집중하면서 기존 질서는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였고, 미국 역시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행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전쟁의 주체가 되면서 유엔의 국제문제 해결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이 같은 정세 변화의 이면을 더 파고들면 서구중심 국제질서의 쇠퇴가 연계되어 있다. 근대 지리상의 발견 이후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을 거쳐 미국에 이르기까지 서구 국가들이 세계를 사실상 지배해왔다. 근대 국민국가 체제를 기초로 산업혁명과 민주주의 발전 등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이끌어 온 것도 분명히 서구였다. 그런데, 서구 선진국으로 불리던 국가들의 경제가 취약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 명분과 윤리적 측면에서도 우위를 상실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강대국들이 이기적이 아닌 적은 없었지만, 한동안 서구 선진국들은 비록 위선적일지라도 명분과 도덕, 자유와 인권을 강조해왔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스스로 그나마 남아있던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면서 발가벗은 이익 경쟁과 거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2차 대전 이후 한 세기 가까이 유지되어 오던 대서양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미국을 착취했다고 비난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맹국 영토에 대한 야심을 표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26년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질서의 파괴자라고 평가했다. 대서양 동맹의 약화에는 안보측면에 있어 미국에 대한 서유럽의 무임승차도 작용하였겠지만, 이익과 거래의 시대에 유럽이 미국과 거래할 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이 더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만약 미국이 유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했다면, 혹은 유럽이 미국의 이익을 자극할 자산이 충분했다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토록 거칠게 동맹국을 다루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구중심 세계질서 쇠퇴의 다른 측면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다. 대부분 피식민의 아픈 근현대사를 공유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이 보여주는 위선을 냉정하게 인식한다. 예컨대 서구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위선이자 이중기준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과 인구, 그리고 성장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들이 세계정세 변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정세 변화의 심연에는 기술발전에 따른 인류 삶의 근본적 변화가 내장되어 있다. 특히 AI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는 산업과 일자리 변화는 물론이고 인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예컨대 이미 AI는 전쟁의 모든 단계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이에 따라 전쟁 수행 양식 자체도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AI에게 어디까지 살상·지휘 권한을 허용할 것인지, 그 책임과 규범은 어떻게 설계해야하는지 등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AI가 인류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면서 미중 간에는 AI 기술 패권경쟁이 전개되는 등 소수 강대국에 의한 기술 독점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각 국가들은 소버린AI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을 축으로 한 기술 블록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즉 표층에서 전개되고 있는 강대국 경쟁과 심층에서 일어나는 기술적 변화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강대국 정치가 강화되면 약소국들의 이해는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이익과 거래가 국가 간 관계의 기준이 되면 국제관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한다. 각 국가의 손익 계산에 따라 친구와 적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 간

지정학적 갈등의 단층대에 놓여있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변화된 정세를 반영한 새로운 외교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이전 정부가 이념과 가치에 매몰되어 우리의 실질적 이익을 훼손하였다는 것에 대한 지적과 반성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은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며 실용적 접근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실용외교의 전략과 지향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특히 강대국 국제정치 시대 우리의 대응전략이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포용적 균형전략

세계정세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 대외정책에 있어 절대우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슈에 따라, 혹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은 이른바 ‘전략적 명료성’을 표방하였는데, 실제로는 가치와 이념에 매몰되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서방 위주의 진영외교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중·러를 통해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북러밀착을 촉진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정부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한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은 한국을 이익의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은 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념이 아닌 실용을 표방하였다. 실용외교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익 제고를 위한 정책적 선택지 확대를 선호한다. 동맹 간에도 서로 이해가 다를 수 있는 국면에서 우리의 국익을 특정 국가와 등치시킨다면 스스로의 선택지를

극단적으로 제한해버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가들 간 이해가 서로 교차하는 이익과 거래의 시대에 우리의 대외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명료성보다는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슈의 성격과 상대에 부합하는 대응전략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

실용 외교는 맹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물신주의나 그때 그때 입장을 바꾸는 기회주의와는 다르다. 외교에서의 실용은 극단적 선택이 초래하는 편협한 결과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더 움직일 수 없는 경직된 교착 상태를 회피하려는 유연한 선택을 선호한다. 물론 모든 국가에는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근본적·핵심적 이익이 존재하며, 이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원칙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실용 외교라고 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관계적·거래적 이익에 대한 유연한 입장이 모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국제관계에서 가치와 이익은 양자택일적 문제가 아니라 양자 간 균형을 얼마나 현명하게 맞추느냐의 문제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강대국들의 핵심적 이익이 가치로 포장되어 다른 국가들에게 강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관계에서 횡행하는 위선과 자국의 이익을 구분하는 판단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실용외교를 위해서는 균형전략(balanced strategy)이 중요하다. 다만 한국의 균형전략은 과거 세력균형 시대 영국이 취했던 패권적 균형전략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우리의 균형전략은 경직된 선택이 초래하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헤징의 의미를 포함하며, 대외전략과 대북전략의 균형, 우리의 이익과 상대국 이익 간 균형을 포괄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러설 수 없는 이슈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상대방과 이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유연한 선택 간 균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균형 전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목표하지 않는 포용성(inclusive)이 요구된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단층대에 위치한 국가에 있어 포용적 대외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한국이 특정 진영에 완전히 경사된 대외전략을 추진하게 되다면, 한반도는 강대국 경쟁의 최전방에 놓인 국가가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현재의 한반도 주변정세를 냉전적 진영갈등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멀어지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북중·북러관계를 강화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갈등구조로 회귀한다면, 우리 대외전략의 선택지는 크게 축소될 것이며 남북관계는 강대국 경쟁의 하위변수로 추락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이른바 신냉전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대국 경쟁의 진영에 매몰되지 않는 다양한 다자·소다자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냉전 시기와 달리 중국,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한 상태이며 상호 주요한 무역 파트너라는 점, 과거와 달라진 한국의 국가 위상과 국력 등 탈냉전 이후 수십년간 우리가 쌓아 온 외교적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대외전략이 필요하다.

자강에 기초한 동맹전략과 전략적 자율성

미국의 대외전략과 동맹정책 변화는 세계정세 변화는 물론 한국의 대외전략 구상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2025년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와 2026년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미국은 달라진 대외인식을 명문화해서 보여주었다. 2025 NSS에서 미국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에 둔 대외정책 추진을 공언하였으며,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국에 무임승차하지 말고 자국 안보에 일차적 책임을 져야하며, 동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은 2026 NDS에서도 분명하게 재확인되는데, 미국 동맹국들의 부담 분담(allied burden sharing) 원칙을 명확히하고, 동맹이 자국 방어에 주도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더 제한적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약하면 미국은 위협의 공유가 아니라 이해(interest)와 거래의 관점에서 동맹을 재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유럽 NATO 국가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갖추지 않고 미국에 무임승차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이익 창출이 가능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이 한국을 모범동맹(model ally)으로 분류한 것은 자국 방어를 위한 비용을 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반도체 등 상호이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이 분명하고, 중국 견제에 있어서도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맹인 한미 간에 작동하는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딜레마이다. 전통적으로는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방기 우려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중 전략경쟁에 집중하는 미국이 동맹으로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면서 원하지 않는 분쟁에 우리가 연루될 위험성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국 안보에 대한 동맹국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면서 해외에서의 전쟁 연루 위험을 감소시키는 한편, 자신들이 원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동맹국들의 부담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요약하면 한국과 미국 모두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의 성격까지 재정의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동맹정책은 ‘자강에 기초한 동맹전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자강이 중요한 이유는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서는 스스로의 능력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념을 기준으로 피아를 구분하던 냉전 시기에는 동맹에 기반한 대외전략이 유효하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최대 우방인 미국이 먼저 동맹을 재정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거래적 동맹의 세계에서는 동맹 간에도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관계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미 합의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맹의 영토에 대한 야심을 감추지도 않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국이다. 다행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우수한 인적자원, 매력 있는 문화, 그리고 회복력이 증명된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도 거래가 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 대한 한국의 안보 의존 문제의 구조적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북한의 핵위협 억제를 위해서는 미국 확장억제력이 여전히 필요하며, 이를 대체할 확실한 방안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반도 방어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이며, 앞으로도 한동안 그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하에서는 우리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른바 ‘전략적 자율성’이다.

원래 전략적 자율성은 미소 냉전시대 유럽의 안보담론을 통해 등장하였으며, 특히 미국과 NATO에 대한 의존성에 거부감을 가진 프랑스의 골리즘(Gaullism) 전통 속에서 구체화 되었다. 전략적 자율성 개념의 핵심은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 축소이며,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독립성 제고를 위한 군사적 자율성을 의미한다. 트럼프 시기를 거치면서 EU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는 전략적 주권(Strategic Sovereignty) 개념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비동맹 국가인 인도는 물론 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대외정책을 정의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결국 전략적 자율성은 고립주의나 자급자족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핵추진잠수함 문제 등이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자국 방어에 있어 일차적 책임을 져야하는 주권국가의 권리와 직결된 이슈이고,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독자적 억제력 확보 문제는 국방 능력 확보와 관련된 핵심 사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관계에서의 전략적 자율성 논쟁의 핵심은 동맹의 파기나 동맹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동맹을 유지하는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한 주권적 선택권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즉 전략적 자율성은 그것을 갖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의 양자택일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슈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발휘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예전대 우리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있는 한반도 이슈에 있어서는 우리의 주권적 선택이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당사국이 아닌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 중심 정책결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동맹관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래의 자산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과거 저발전된 약소국이었던 한국이라면 전략적 자율성 논쟁은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강대국들과 거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략적 자율성은 한미동맹 관계에만 적용되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는 것만큼이나 중국에 대한 경제적 편중에서 탈피하여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이고 경제·기술 협력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의 대외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책적 선택지를 축소시키는 제한조건을 완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선택권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포용적 균형전략이 필요한 것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정세 하에서 우리의 정책적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면, 전략적 자율성 제고는 우리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직결된 문제이다.

글로벌 책임강국 외교

이상의 논의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더 이상 변방 혹은 주변부 국가에 머무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성장한 국력과 위상에 부합하는 적극적·능동적 외교로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외교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시대에 한국도 편승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강대국들의 선택에 대한 수동적 대응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한 한국의 능동적 선택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물론 한국 역시 무정부상태의 국제질서 하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다만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되 힘을 통해 타국을 강압하거나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동의와 협력에 기반한 규범과 제도를 주도하는 길을 통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한국의 지향은 힘을 길러 다극화(multipolarization)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동의하는 규칙하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질서여야 한다. 한국이 가진 제조업 경쟁력과 문화적 매력, 제도적 복원력을 고려할 때, 공정한 경쟁만 보장된다면 충분히 스스로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한국의 대외정책은 한반도는 물론 지역과 세계의 질서와 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이기도 해야 한다. 특히 현존하는 선진국들 가운데 피식민의 아픈 역사를 가진 유일한 국가로서 한국의 대외정책은 기존 강대국들의 대외정책과 달라야 할 것이다.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혹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희생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이익을 글로벌 이익과 등치시킬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이 지향해야 하는 비핵평화는 수동적으로 핵개발을 좌절당한 국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제 비확산 핵규범을 주도하는 의미에서의 비핵평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제도적 규범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도 있다. 물론 공정한 경쟁에서 정당하게 승리하여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단기 이익에 매몰되어 상대 국가에 장기적·구조적 폐해를 끼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현지의 역사적 연원과 현실을 무시한 채 수없이 그어놓은 수직·수평의 국경들이 현대에 발생한 수많은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제규범의 수용자에서 국제 규범을 주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강력한 국력만이 아니라, 그 국가의 입장에 동조하는 다수의 우방과 함께 해야 가능하다. 우리가 중견국 연대를 추진하고, 글로벌 사우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우리가 강대국 경쟁의 특정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 포용적 대외전략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